

출장복명서

1. 출장자

- 박문수 (산업경쟁력연구본부 연구위원)
- 문종철 (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산업통상정책 연구실 부연구위원)

2. 관련 과제

- 고령화·저성장 시대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

3. 출장목적

- 연구과제의 참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및 기업의 고용 양상 변화와 관련된 정보 수집

4. 출장지

- 일본 도쿄

5. 출장기간

- 2017년 2월 22일(수) ~ 2017년 2월 24일(금), 2박 3일

날짜	장소	방문처 및 일정
2월 22일(수)	서울 - 도쿄	- 서울 출발, 도쿄 도착
2월 23일(목)	도쿄	- 재무성, 도쿄대학 방문
2월 24일(금)	도쿄	-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방문
	도쿄 - 서울	- 도쿄 출발, 서울 도착

6. 숙박 내역

○ 2.22.(목) ~ 2.24(금) : 도쿄 2박

- 숙소명: Royal Park Hotel, The Shiodome
- 주소: 1-6-3 Higashishinbashi, Minato-ku, Tokyo, Japan
- 전화: +81-3-6253-1111

7. 면담내용

□ 면담자

- 고지마 가쓰히사 (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)
- 나카야마 미쓰테루 (재무성 예산국 조사과)
- 가와구치 다이치 (도쿄대학 대학원 교수)

□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

(1) 일본의 인구구조

○ 인구구조의 특징

- 일본의 인구구조의 특징은 고령화 후 저출산
- 기존의 인구구조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전제는 조금씩이라도 인구는 증가
: 현실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고 이민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

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

- 2060년에는 인구의 60%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보임

○ 고령자의 분할

- 만 65세 ~ 74세까지를 초기 고령자, 만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
- 2010년까지는 초기 고령자의 수가 후기 고령자의 수를 웃돌았으나 그 이후는 후기 고령자의 수가 초기 고령자의 수를 초과하기 시작.
- 후기 고령자는 고령자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은 계층으로 요양수요도 그만큼 증대
-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사망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

○ 출생은 감소

- 현재는 1년에 약 30만 명의 인구가 소멸 중
- 앞으로는 1년에 광역시 1개 규모의 인구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

(2) 가족형태

○ 가족형태의 변화

- 1995년까지 부부 + 미혼 자녀의 표준적 형태가 대세
- 그러나 그 후 미혼자녀의 독립과 노부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경향
-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인구 증가.

⇒ 2013년까지 일본 가구의 3분의 1이 1인가구화할 것으로 보임.

○ 부부 혹은 독거노인 증가

- 1985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의 비율이 70%였으나 2013년에는 40%로 하락
- 고독사, 보이스피싱 문제 증가

(3) 지역간 차이

○ 광역자치단체

- 수도권외의 경우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음.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전망
- 지방의 경우 고령자의 비중이 높음
- 도시부의 고령자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

○ 기초자치단체

- 2040년에는 95%의 기초자치체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- 수도권, 지방도시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
- 2040년까지 지자체별 고령자 수가 증가할 전망
: 한계지자체(고령자의 비율이 50%가 넘는 지자체)의 출현
- 고령화가 진전되어 젊은 세대, 특히 가임기 여성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 인구가 추가되지 않아 소멸할 위기 ⇒ 소멸 지자체 출현 우려

(4) 산업구조와 가계의 변화

○ 산업구조

-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남
- 서비스업 안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고 피고용인이 늘어남
- 서비스업 피고용인 증가의 이면에는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가 있음
: 2012년에는 취업자의 30%가 비정규직

○ 가계의 변화

- 1인당 소비지출에서 교통 통신비의 지출이 증가
- 임금정체의 영향으로 나머지 지출은 정체
- 1995년 이후 임금 수준의 변동은 없으나 그 이면에는 임금삭감, 실업, 취업포기 현상이 있음
: 실업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취업포기자 수가 증가.

(5) 사회보장

○ 사회보장비 증가

- 2011년 사회보장 지출액은 107조 5000억 엔에 달함
- 2011년 사회보장 수입 115조 7000억 엔 중에서
 - i) 보험료 납부: 60조 1000억 엔(가입자 31억 1000억 엔, 고용자 29조 엔)
 - ii) 세수: 43조 5000억 엔(국세 31조 5000억엔, 지방세 12조엔)
 - iii) 기타: 10조 4000억 엔
- 일본은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이 22.58%로 유럽 국가들보다는 적지만 미국, 한국 보다는 높은 수준
- 사회 보장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보험료, 연금,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대의 수가 감소

○ 사회보장의 당면과제

i) 건강보험

- 건강보험 비용 상승 억제
- 의료보험 역할 분담

ii) 연금

- 현 체제의 지속가능성: 기여와 수급의 균형
- 한 체제로의 통합
- 배우자 연금 문제

iii) 장기 요양보험

- 요양보험 비용 상승 억제
- 요양 종사자 근로조건과 질적 요인의 양립이 과제
- 통합된 지역사회 요양 체제의 구축
: 고령자가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보험, 장기 요양보험, 기타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 강화

iv) 공적부조

- 공적 부조 대상자 수의 증가
: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없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에서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
- 경제적 독립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독려

(6) 일본사회의 변화와 당면과제

○ 변화

- 인구와 가정
 - i) 21세기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ii) 가구의 규모는 작아지고 고령자들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
- 지역
 - i) 도시 지역에서의 고령화의 가속
 - ii)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의 인구의 감소
- 경제: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달성하기 어려움
- 불평등: 소득, 부, 건강, 고용 등에서의 불평등 심화

○ 당면과제

- 고령화, 출산률 저하, 인구감소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처 필요
- 경제정책: 경쟁력 강화와 가구의 구매력 유지
- 사회정책: 불평등, 빈곤, 사회보장(지속 가능성, 맞춤형 복지 등)

□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문제

(1) 일본의 재정구조

1) 일본의 예산구조

○ 한국과 일본의 예산구조의 차이

- 한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통합예산
- 일본은 일반예산만 있음

○ 일본의 예산 규모

- 96조 3000억 엔
- 그 중의 4분의 1이 국채임

2) 일본의 재정구조의 특징

○ 세출규모: 10조

-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비중이 높은 편
 - : 현재의 국채 잔고가 약 800억 엔으로 금리가 1%상승하면 이자부담만 8억 엔 증가
 - 즉, 일본의 재정은 항상 금리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.
- 그 외에 사회보장 지출이 32조 엔
 - :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년 1조 엔 정도 증가
- 지방 일반경비: 15조 5000억 엔
- 공공사업: 10조 엔에서 6조 엔으로 감소
- 방위비
 - i)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의 자민당의 방침으로 GDP의 1% 이내로 제한
 - ii) 현재의 GDP 규모가 500조 엔이므로 매년 5조 엔 정도 지출

○ 세입 구조

- 세금 56.6%
- 국채발행 38%
- 세수
 - i) 소비세 17조 엔
 - : 소비세율을 5%에서 8%로 인상한 영향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
 - 향후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 계획

ii) 소득세 16조 엔

(2) 세출입 구조의 변화

○ 세출구조의 변화

- 2008년에 세출을 100조 엔까지 인상
: 리먼 쇼크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
- 민주당 집권으로 복지확대
- 동일본대지진 복구예산 필요

○ 세입

- 버블 경제가 정점에 달하던 90년까지는 세입규모가 꾸준히 증가
: 세수와 세출이 동시에 확대
- 그 후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가 감소
- 그 이후로는 명목 GDP 자체가 감소하면 세수가 더욱 감소
- 결국 세입과 세출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
- 세수 증가 원인
 - i)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회복
 - ii) 소비세 증가
: 소비세율을 10%까지 올리면 정점기 수준의 규모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임

○ 국채

- 매년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온 결과 2014년 말 국채 잔고는 807억 엔에 이릅니다
- G20 국가 중에 일본은 유달리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느림
: 그 이유는 국채의 잔고가 높아서 이자지급 규모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
- 일본의 GDP 대비 국채의 비율은 약 200%

(3) 사회보장 비용의 문제

○ 1990년과 2015년의 비교

- 매년 평균 1조 엔씩 사회보장비용이 증가
: 1995년 세수의 11.6%를 차지하던 사회보장비용이 2015년에는 31.5%까지 상승
- 다른 지출예산은 거의 불변인 가운데 세수가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용을 국채로 벌충하는 구조
→ 즉 일본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사회보장비용

○ 복지지출의 규모

- 2011년 이후 사회복지 규모가 확대되어 비교대상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지출의 규모는 중위권 수준
: 따라서 일본을 저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음
-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국제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의 비중이 적은 편
- 복지지출 규모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중위권 수준이지만 조세수입은 하위권으로 이로 인하여 재정수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.
→ 즉 일본은 복지의 수준은 높는데 부담은 적은 구조임.
-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축소와 부담의 증대 어느 쪽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

⇒ 사회보장과 세액의 일체화 개혁이 필요.

○ 사회보장 문제의 가장 큰 원인: 고령화

가)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1차 베이비 붐 시대를 맞음

- 1차 베이비붐 세대는 2022년~2025년 사이에 75세를 맞이하게 됨.
: 현재는 인구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역삼각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나) 문제는 사회보장 규모의 증가

-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이 되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추가되는 구조를

하고 있음.

: 64세 이하까지는 1인당 의료비 국고부담이 25만 엔인 반면, 65~74세는 85만 엔, 75세 이상은 326만 엔으로 증가.

- 이는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를 기업부담에 의존할 수 없게 되어 그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.

: 즉 75세가 넘으면 64세 이전과 비교해서 의료비의 국고부담이 10배로 증가

→ 문제는 2025년이 되면 1차 베이비 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기게 됨.

- 2012년에서 2025년 동안 GDP가 매년 3%씩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의 GDP는 2012년의 약 1.27배가 됨.

: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 연금의 증가는 1.12배에 그쳐 GDP 성장을 따라잡지 못함.

→ 고령화에 따라 연금 급여수준이 하락

-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 수준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비와 요양비 지출 증가 때문

: 고령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는 2025년에 각각 2012년의 1.54배와 2.34배로 증가하여 GDP 성장률을 넘을 것으로 보임.

다) 현재 일본은 선진국 중 고령화의 수준이나 속도로 볼 때 가장 고령화된 국가

-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도 더욱 고령화가 진전되는 고령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짐.

라)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복지비 부담은 낮은 편임.

(4) 일본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극복노력

○ 일본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

가) 복지의 도입이 고도 성장기에 결정

- 고도 성장기는 세수도 높고 금리도 높던 시절이라 연금을 도입하면서 급

여수준만 정하고 세수부분을 유보

: 급여수준은 고도성장기의 금리인 연 5.5%의 운용수익을 상정하고 결정
함

-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연금 운용수익이 하락

나) 불완전한 급여체계

- 세수는 외면한 채 급여수준만 정하다 보니 연금 운용수익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게 됨.

- 결국 세입으로 연금을 채워야 하는데 연금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어 국채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됨.

⇒ 처음부터 연금급여수준과 세수의 규모를 동시에 정했어야 했다는 반성

○ 재정운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

가) 소비세 인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

- 특히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비 도입 등 전세대형 복지를 도입

- 소비세 인상으로 얻게 되는 5%의 세입 증가 중에서 1%인 약 2조 8000억 엔을 사회보장에 충당하기로 결정

: 국가로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국채상환에 쓰고 싶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

나) 재정 건전화 방안

- 리먼 쇼크로 전 국가의 재정이 악화

: G20 국가가 각국의 재정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할 것으로 합의

- 그러나 일본은 국채의 제약이 높은 관계로 이자지급과 부채총액을 제외한 primary balance를 반으로 감축하는 유예조치를 받음

: 이러한 유예조치의 근거는 primary balance를 균형을 맞추면 명목상 채무 잔액을 GDP 대비 절반으로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

- 그리고 2015년까지 일본은 주어진 재정건전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논의 중.

○ 재정 건전화 계획의 시나리오

-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재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고 싶으나 성공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재정적자의 규모가 9조 4000억 엔에 달함
: 따라서 세출을 억제하고 세입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- 세입 증대 방법 중의 하나가 소비세 인상이나 당장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세출억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: 세출의 억제는 사회복지 외의 지출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남.

⇒ 2020년까지 구체적인 정책의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

다. 일본 고령자들의 취업 현황과 정부의 대책

(1) 일본 고령자의 취업 현황

○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의 비율

- 일본 고령자의 취업은 2000년대 들어와서 60~64세 이상의 고용자 및 65세 이상의 고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
-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약 6600만 명이며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%를 차지. 1980년의 약 5%의 2배 이상을 기록
- 수입을 동반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70%를 웃돌고 있으며 노동 기간에 대해서는 “일할 여력이 있을 때까지”로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.
- 일본의 전 산업에서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약 9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 들어와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60~64세의 비율을 뛰어 넘음. 65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 취업자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여 2015년에는 13.5%에 달함.

○ 고령자의 고용환경

- 고령자의 고용 환경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60세를 경계로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이 상승
-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의 경우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고령자의 비율이 약 75%에 달함.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약 11만 개사에 달함

(2) 고령자 취업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책

-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고령자만을 위한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

○ 고령자 취업 관련 정책

- 평생현역고용제도 도입 및 매뉴얼 작성

-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전국 각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업체단체를 선정하여 각 업체단체에서 평생현역고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매뉴얼 등을 선정
- 산하 기업을 통하여 평생현역고용제도의 도입, 계발 및 매뉴얼의 보급을 계획하는 평생현역사회실현사업 실시

- 기업에서의 고연령자 활용 촉진

- 기업에서의 고연령자 활용 촉진을 위해 고연령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고용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
- 고용기간 동안 고령자가 무기전환신청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는 유기고용 노동자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
- 고연령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융자제도에서 고용창출효과 요건 완화
- 고연령자를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올

린 기업을 다양성경영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

-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도록 고용주에 대한 지도, 상담, 원조

- 다양한 형태의 고용, 취업기회 확보

- 고령자들의 다양한 취업수요에 대응하여 의욕 및 능력에 대응하는 취업기회, 사회참가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버인재센터 사업 운영
: 각 실버인재센터에서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지방 공공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버인재센터의 사업 개시를 지원
- 지역의 경영자 단체와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협력하에 고용을 전제로 한 기능교육, 면접, 사후 지원 등을 일체화하여 행하는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 사업 실시
-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을 전개

- 고령자 재취업 지원, 촉진

- 고용주로 하여금 고연령자의 희망에 따라 직무경력, 직업능력 및 재취업지원조치 등을 기재한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교부를 의무화
: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에 job card 등을 활용하도록 촉구
-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고연령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생활의 재설계에 관한 지원 및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팀 구성
- 경력, 기능, 지식 등의 문제로 안정된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에 대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통하여 일정기간 시험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시험고용장려금 및 특정구직자고용개발지원금 등의 정책을 시행
- 노동이동지원조성금을 통하여 이직이 불가피한 고연령자들의 재취업을 민간의 직업 소개에 위탁하는 고용주 및 고연령자를 조기에 고용하는 고용주, 고연령자의 훈련을 시행한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

- 기업의 지원

-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고연령자들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융자제도를 통해서 고연령자들의 창업을 지원

○ 근로자들의 생애에 걸친 능력 발휘 유도

- 근로자들의 전 근로기간에 걸친 능력의 개발

-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촉진하여 인재를 육성, 확보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연결
- 직업훈련의 실시와 능력위주의 노동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전 근로기간에 걸친 경력형성지원을 촉진

- 여유있는 직업생활의 실현

-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,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로시간과 가정, 지역사회,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시간을 균형있게 조합하여 Work-life balance를 실현
- 현재 일본은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약 10%에 달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취득률은 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
-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시간외 근무 및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 촉진을 비롯한 사안들에 대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촉진
- 또한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후생노동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근로삭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경영자들에게 근로형태의 개선을 유도

- 직장가정의 양립대책 추진

- 육아 및 가족간호 휴직법의 내용을 경영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
-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운 직장환경을 정비하여 육아 및 가족간호의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쉽도록 함
: 이를 위하여 일·가정양립지원기금의 지급 및,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정보를일원화하는 종합지원 사이트 등을 운용
- 또한 중·노년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이직, 전직하

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모델을 정비, 추진하고 모범 기업에 대한 표창들을 통하여 기업들의 참가를 유도

○ 전세대 참가를 통한 초고령화 사회 대응 기반 구축

-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

- 파트타임 근로자가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정비하고
- 정규직 사원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상담 및 지원, 경영자에 대해서 근무 분석 및 직무평가 체계의 도입지원 및 기금 활용 등의 정책 추진
- 육아, 가족간호 및 지역활동 등 개개인의 생활형태 및 생애단계에 대응한 근무형태를 실현하기 위한 단시간정사원제도의 도입 정착을 촉진

- 정보 통신을 활용한 원격지 근무형태의 개발 보급

-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텔레워크(telework, 원거리근무) 등의 제도도 도입.
- 또한 직장생활의 계속이 곤란한 육아기 여성 및 육아에 참가하는 남성, 가족간호를 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고용형 재택 텔레워크제도 추진을 위하여 추천 모델을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원하고
- 텔레워크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도입, 보급을 장려하고 텔레워크에 의한 근무형태 및 텔레워크 인구 실태 파악, 텔레워커 전개 거점의 정비 등을 추진
- 일과 육아, 가족간호의 양립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실현을 위한 텔레워크 모델을 확립하고 성공사례 작성 등을 통하여 효과를 전파